



행정안전부,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

-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등 -

- ♣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,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.
- ♣ 먼저『특별지방행정기관』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게 된다.
 - “중앙정부는 정책적 ·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,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”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
 -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 중 우선 1단계로 국도 · 하천, 해양항만,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 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.
 - 그리고, 중소기업, 노동, 환경, 산림,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.
- ♣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,
 - 국도 중 간선(幹線)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, 한강 등 5대 국가 하천을 제외한 하천 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,
 -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 ·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.
 - 또한,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 · 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.
- ♣ 이를 통해,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,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 ·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
 -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,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.

- ♣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, 인력·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 - 특히,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,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, 연고지 우선 근무,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♣ 다음으로, 행정안전부는 『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』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 - 즉, 행정안전부는 비선호(NIMBY)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,
 -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,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♣ 이와 함께,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
 -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-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.
- ♣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/F를 구성,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 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.
- ♣ 또한,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·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이를 위해,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과 연계되도록 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,
 -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- ♣ 이와 함께,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(16개 → 7~8개)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,
 - 단일법인 지방세법의 분법(分法) 및 『알기 쉬운 법 만들기』를 추진하며,
 -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Zero-base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.